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감내할 수 있고 국가 경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지난 6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제1안(배출전망 대비 14.7% 감축)보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제1안조차 2030년 실질 GDP의 0.22%를 감소시키며,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 적용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이미 최신 감축기술들을 현장에 대부분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제1안 이외 다른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은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해 실제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둘째,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에는 자국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을 본격화한 미국 등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DC)는 기존 공약 후퇴 방지 대상이 아닙니다.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교토협약 과정에서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존 공약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DC) 제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될 신 기후체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 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경제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해주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2015. 6. 16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민간발전협회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